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사단
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
International Law Research Center

CONTENTS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습 세미나

| | |
|--------------------------------|-----------|
| 1. 개회사 | 01 |
| - 윤희근 경찰청장 | 03 |
| -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04 |
| 2. 축사 | 05 |
| - 정동은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고문 | 07 |
| 3. 발제 | 09 |
| 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 | 11 |
| -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 |
| 나. 스토킹 가해자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효과성 | 35 |
| - 한민경 교수(경찰대학 행정학과) | |
| 다. 아동성범죄자 거주지의 제한 관련 해외 입법사례 | 47 |
| - 이지혜 국장(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 |
| 4. 토론 | 71 |
| -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73 |
| - 민경화 경정(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 78 |
| - 이기봉 경감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83 |
| - 장윤모 팀장(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87 |
| - 김지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90 |
| -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 94 |

01

개회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싱그런 푸르름이 묻어나는 4월의 끝자락에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공동주최기관 관계자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경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범인검거 및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다각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임시숙소 제공, 피해자 모니터링, 지원기관 연계 등 플랫폼 치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경찰만이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치안의 공동 생산자로서 뜻을 모아 소통하고 협업하여 피해자를 입체적·종합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병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성범죄 전과자 거주지 제한, 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등 다양한 가해자 제재조치를 병행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7.

경찰청장 윤 희 근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학자입니다.

오늘 경찰청, 고려대학교 국제법 연구센터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뜻깊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 등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기존의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일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의 평범하고 평온했던 일상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의 일상을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기 위해 오늘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님은 특히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등의 조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민균 교수님은 근래 많은 법적,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킹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이지혜 고려대 국제법 연구센터 국장님은 아동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해외 사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참고하고 변화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세 분의 발제자 분들 못지않은 훌륭하신 토론자 여러분들이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논의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향후 법적, 제도적으로 충실히 반영되어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같은 고민을 나누어주신 윤희근 경찰청장님, 정동은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고문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연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학 자

02

축 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 고문직을 맡고 있는 정동은입니다.

먼저 개회사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그리고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주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 동료이자 후학이기도 한 국제법연구센터 이지혜 국장께도 각별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주로 국제기구와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개인적으로도 유엔의 세 축, 즉 Pillar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인권 및 개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확정하기에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라 함은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들로부터 차별받기 쉬운, 즉 그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 발제들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 중 아동,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들의 대부분인 여성 역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과 스토킹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스토킹법”의 제정,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스마트워치의 보급”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오늘 공동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신 관련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은,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존의 실무 경험과 이론적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중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는,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천천히 과감히 외부에 드러내려 했던 견고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일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기관과 단체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는 훨씬 더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어른만큼 자신들의 고통을 외부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변하는 눈과 입이 되어 그들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특히 성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강화 및 기존의 법률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범죄안전 대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동과 여성이 범죄로부터 보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효과성 제고, 그리고 아동성범죄자 거주지의 제한 관련 해외 입법사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주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에 있어서 관련 NGO 및 시민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향후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있어서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애써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비추어,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축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고문 정 동 은

03

발 제

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

-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이수연

아동학대 실태 (2020 및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 신고자 중 아동 본인 : 14.2%(2020), 17.2%(2021)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부모 82.1%(2020), 83.7%(2021)
- 아동학대 발생장소 : 가정 내 84.9%(2020), 84.2%(2021)

>>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



피해아동상황(2020 및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 원가정보호 : 83.9%(2020), 84.6%(2021),
- 분리조치 : 12.7%(2020), 14.5%(2021)
- 가정복귀 : (2020-피해아동 중 2.6%)
(2021-분리보호 된 아동 중 가정복귀- 18.4%, 피해아동 중 2.7%)
 - 분리 후 원가정 복귀 비중 20% 미만

>> 엄격한 요건하에 분리, 가해자, 가정환경 개선의 어려움



재학대 사례 현황 (2020 및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 2020- 11.9%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부모 (95.1%)
 - 원가정보호(63.8%), 분리조치(23.4%)
 - 2021- 14.7%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부모 (96%)
 - 원가정보호(74.4%), 분리조치(24.7%)
- >>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별지참조)

- 아동 보호를 위하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학대행위자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 피해아동 :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 피의자(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처리 절차
 - 형사절차(형사법원에서 처벌), 아동보호사건절차(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2020응급조치 현황(2020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표 1-3-2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 건, %)

| 분류 | 건수 | | 조치 내용 | | | | | | | | | |
|---------------|-------|---------|-------|--------|-----|--------|-------|--------|-----|-------|-------------|---------|
| | | | 1호 | | 2호 | | 3호 | | 4호 | | 계 (총복합계) | |
| 상담원 | 811 | (53.8) | 54 | (5.5) | 97 | (10.0) | 766 | (78.6) | 57 | (5.9) | 974 | (100.0)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77 | (5.1) | 4 | (4.3) | 10 | (10.8) | 75 | (80.6) | 4 | (4.3) | 93 | (100.0) |
| 경찰 | 620 | (41.1) | 217 | (22.1) | 258 | (26.2) | 444 | (45.1) | 65 | (6.6) | 984 | (100.0) |
| 계 | 1,508 | (100.0) | 275 | (13.4) | 365 | (17.8) | 1,285 | (62.7) | 126 | (6.1) | 2,051 | (100.0) |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처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2020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13.4%)
-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17.8%)
-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62.7%)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6.1%)



2021응급조치 현황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표 1-3-25〉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건, %)

| 분류 | 건수 | 조치 내용 | | | | | | | | | |
|------------|---------------|--------------|--------------|--------------|-----------|---------------|--|----|--|-------------|--|
| | | 1호 | | 2호 | | 3호 | | 4호 | | 계 (중복집계) | |
| 상담원 | 348 (10.3) | 39 (9.0) | 64 (14.8) | 317 (73.5) | 11 (2.6) | 431 (100.0) | | | | |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348 (10.3) | 29 (6.9) | 64 (15.2) | 313 (74.5) | 14 (3.3) | 420 (100.0) | | | | | |
| 경찰 | 2,673 (79.3) | 1,342 (32.9) | 1,149 (28.1) | 1,421 (34.8) | 172 (4.2) | 4,084 (100.0) | | | | | |
| 계 | 3,369 (100.0) | 1,410 (28.6) | 1,277 (25.9) | 2,051 (41.6) | 197 (4.0) | 4,935 (100.0) | | | | | |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2021 응급조치 현황

-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28.6%)
-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25.9%)
-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41.6%)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4.0%)



응급조치 실태 및 개선방향

- 가해자가 아닌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로 이전하여 분리하는 형태
- 가해자가 보호자이고 피해자가 아동인 특수한 사정(cf. 가정폭력인 경우)
- 가해자는 일상을 영위
- 아동에게 가해자 외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
- 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다만 아동등 안전이 담보되어야)
- >>임시조치7호 유치, 보호처분6호 감호위탁과 연결



2020임시조치 현황 (2020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표 1-3-22〉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건, %)

| 신청인 | 인용 건수 | 기각 건수 | 총 건수 | 인용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1호 | 2호 | | | | |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결정 계 중복제 | |
| | | | | | 주거 | 학교 학원 | 보호 시설 | 병원 | 기타 | 소계 (중복제) | | | | | | | 소계 (중복제) |
| 계 | 2,451 (90.9) | 246 (9.1) | 2,697 (100.0) | 277 (6.1) | 661 (25.7) | 846 (32.9) | 964 (37.5) | 54 (2.1) | 49 (1.9) | 2,574 (100.0) | 1,426 (31.2) | 888 (19.4) | 53 (1.2) | 1,786 (39.0) | 143 (3.1) | 1 (0.0) | 4,574 (100.0) |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020 임시조치 현황

-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6.1%)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1.2%)
-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19.4%)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1.2%)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39.0%)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예의 위탁(3.1%)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예의 유치(0.1건)



2021 임시조치 현황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

〈표 1-3-26〉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 신청인 | 인용 건수 | 가각 건수 | 총 건수 | 인용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1호 | 2호 | | | |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결정 계 (중복 집계) | | |
| | | | | | 주거 | 학교 학원 | 보호 시설 | 병원 | 기타 | | | | | | | 소계 (중복 집계) | 소계 (중복 제외) |
| 계 | 3,561 (97.0) | 112 (3.0) | 3,673 (100.0) | 729 (10.4) | 1,277 (29.6) | 1,478 (34.3) | 1,286 (29.8) | 98 (2.3) | 175 (4.1) | 4,313 (100.0) | 2,428 (34.6) | 1,444 (20.6) | 51 (0.7) | 2,233 (31.9) | 120 (1.7) | 4 (0.1) | 7,009 (100.0) |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021 임시조치 현황

-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10.4%)
-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4.6%)
-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0.6%)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0.7%)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31.9%)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1.7%)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0.1%, 4건)



임시조치 중 유치장, 구치소 유치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유치장, 구치소 유치 활성화 필요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음

>> 불복절차가 있으나, 행위자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가정폭력 사건도 마찬가지)

>> 체포, 구속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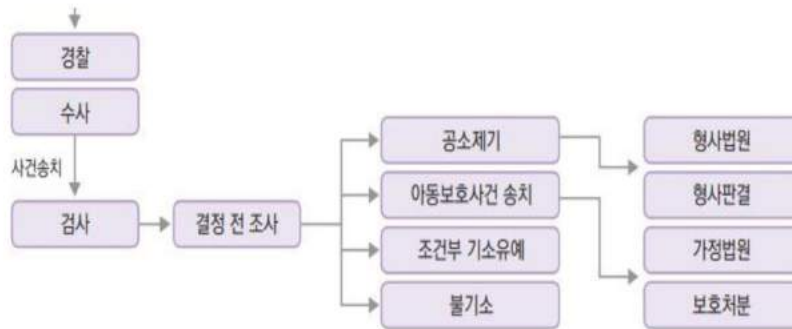
- 가해자 처벌 목적이 아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것

-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분리 조치

>>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감호위탁처분 검토 필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 절차구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처리 형태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비판 :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 사건 경중에 따라 이원적 처리

피해자 처벌불원시에도 사법기관 개입 가능(아동학대처벌법 27조)

원가정유지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행위자 개선이 아동에게 더 유익할 수 있음

다만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중범죄에 대한 경한 처벌이 비판의 원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등 사건처리 현황

- 2020 및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 2020검찰 사건처리 : 아동보호사건 송치(7.2%), 가정보호사건 송치(0.8%), 공소제기(0.4%)
- 2021검찰 사건처리 : 아동보호사건 송치(5.9%), 가정보호사건 송치(0.3%), 공소제기(0.5%)
- 2020법원 판결 : 보호처분(14.6%), 형사처벌(2.5%)
- 2021법원 판결 : 보호처분(11.6%), 형사처벌(2.0%)

>> 형사절차보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훨씬 높음

>>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처분결정이 실효적이어야



19

아동보호사건 - 보호처분

-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20

아동보호사건 - 보호처분

- 2020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2건, 치료위탁 63건(보호처분 합계 1,635)
- 2021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1건, 치료위탁 41건(보호처분 합계 1,874)
- 가장 높은 비율은 상담위탁



21

치료위탁 활성화 필요

- 가해자 중 정신적 결함(정신질환, 알콜중독)이 있는 경우가 많고,
- 피해아동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치료받기를 희망
- 임시조치6호 의료기관등 위탁, 보호처분7호 치료위탁
- 집행력 문제
- 비용 문제 :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22

아동학대처벌법상 감호위탁

-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3

감호위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2022.8.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별표1 - 전국 17군데 특정하여 지정



24

아동학대처벌법상 감호위탁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감호위탁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감호위탁

•<2022. 11. 25. 여성신문>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라, 판사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와 분리하고 교정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 1997년 법 제정 이래로 별도의 감호위탁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뿐이다(2015~2022년 사법연감).

•대신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상담소로 보내져 상담, 교육,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거나, 범죄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담소 종사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비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감호위탁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전)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개정 후)

•6. 법무부상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상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감호위탁을 하지 않는 이유

- 2020년도 2건, 2021년도 1건, 사문화?
- 형벌이 아님에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
- 보호감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시설, 인력, 비용문제
- 요건 : 판사가 심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호위탁 내용 : 성행을 위한 교정행위?
-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치료위탁과 구별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아동학대처벌법상 감호위탁 사례

•2016.9.6.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에게 법원이 전국 처음으로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정현희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 중인 A(47) 씨에 대해 보호관찰 1년(5호)과 감호위탁 1년(6호), 치료위탁 1년(7호), 상담위탁 1년(8호)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정기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와 상담 치료 등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친딸인 B(12)양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주위의 신고로 B양과 B양의 동생은 친인척 집에서 2주가량 생활하다가 귀가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감호위탁 사례

- 그러나 A 씨는 B양과 동생에 대한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겁에 질린 B양과 동생은 또다시 학대 피해 아동 혐의로 옮겨져 생활했다.
-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자진 퇴원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
-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을 거쳐 법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5월 18일 2호 처분인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 이어 법원은 지난 8월 11일 열린 A 씨의 아동보호사건 제1차 심리기일에서 A 씨에게 추천교도소에 임시 유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2차 심리기일에서 감호위탁 처분 등을 내렸다.
- 추천지법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장 엄중한 감호위탁 처분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피해 아동과 행위자를 격리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감호위탁이 필요한 경우 예시

- 1)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하여(사회내 처분으로 부족한 때)>>프로그램 마련
 - 2)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확보>>빠른 절차 필요
 - 3)아동학대처벌법 제40조 보호처분 변경으로 감호위탁 처분(cf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 보호처분등의 불이행죄)
 - 4)형사처벌이 부적당한 경우
 - 5)상습학대
- >>실제 감호위탁처분 사례확인, 분석할 필요



감호위탁 개선방안

- 피해자와 분리목적인 경우 감호위탁 처분시까지 기간 단축이 필요함
- 사건신고부터 보호처분시까지 수개월 소요
- 빠른 절차 진행 필요
- 응급조치 2호, 임시조치 7호, 보호처분 6호로 연결하는 방법
- 임시조치 7호 결정을 하면서 그 기간 안에 보호처분 6호 결정까지 하도록
- 초기 경찰, 검찰 판단이 중요
- 체포,구속 요건과 임시조치 7호 요건은 다름



33

감호위탁 개선방안

- 감호위탁 모델 마련 필요 - 한 가지 형태여야 하는가?
- 시설 내 처우 방식, 중간처우 방식
- 부정적인 인식 개선 필요(비판 : 인신의 자유제한, 비용부담 등)
- 피해자 분리시에도 국가, 사회가 비용 부담
- 피해자에게는 강제할 수 없어 안전 미흡, 가해자 분리하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음
-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건강한 사회(폭력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것
-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유지 비용으로 접근



34

감호위탁 개선방안

- 감호위탁 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과태료

>> 집행력 문제



35

감호위탁 개선방안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의료기관등 위탁)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 제7호(치료위탁) 및 제8호(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중간처우 형식의 감호위탁인 경우 행위자에게 비용부담 하도록 하는 방향



36

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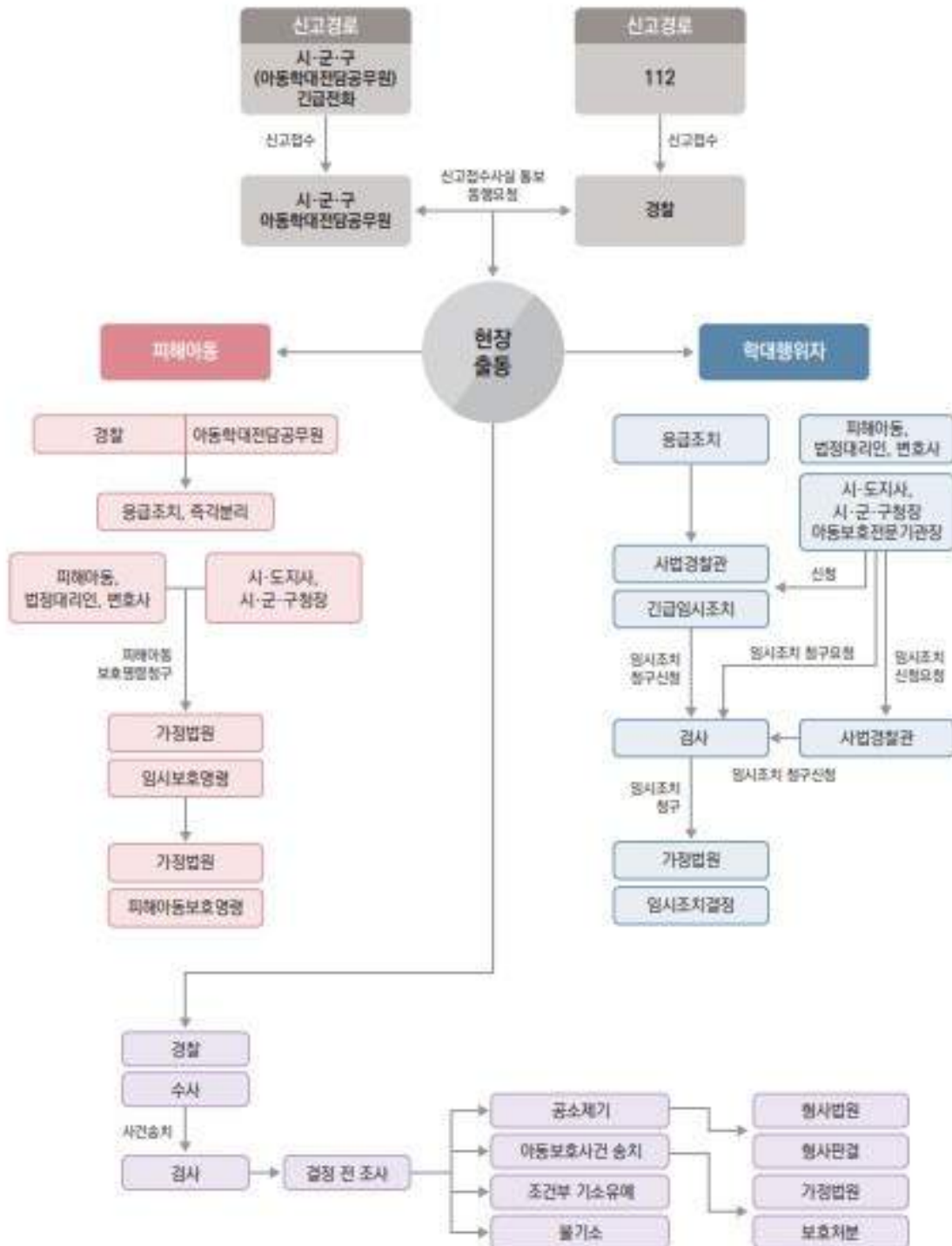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것인가?



별지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감호위탁 보호시설

| 순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주 소 |
|----|------------|---------------------------|
| 1 |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
| 2 | 서울동부지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
| 3 |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
| 4 |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
| 5 |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
| 6 |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
| 7 |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
| 8 | 강원동부지부 |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 |
| 9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
| 10 | 충북지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
| 11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
| 12 | 경북지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
| 13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
| 14 | 경남지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
| 15 |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
| 16 |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식고개옛길 127-4 |
| 17 |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

나. 스토킹 가해자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효과성

- 한민경 교수(경찰대학 행정학과)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도입 : 전자감독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가?

한 민 경 (경찰대학 교수)

전자감독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가?: 개관

- 논의배경
- 논의 진행경과
- **효과성**(effectiveness)을 중심으로 한 쟁점의 재구성
-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영국, 호주
- 논의 및 시사점

논의 배경

- | | |
|-----------------------|--|
|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 스마트워치 응급 호출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경찰, 용의자 추적중 |
| 2021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 또 스토킹 살인...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흥기 휘둘러 가족 참변 |
| 2022년 1월 12일, 충남 천안시 |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발부 |
| 2022년 2월 15일, 서울 구로구 | 스토킹 위험도 '심각'이었는데...신변보호 여성 참변 또 못 막았다 |
| 2022년 6월 6일, 서울 성남시 | 신변보호 중 참변...'스토킹' 전 남자친구 흥기에 숨졌다 |
| 2022년 6월 8일, 경기 안산시 | 안산시 스토킹 당하던 여성 흥기에 찢려 사망...올 상반기 벌써 세 번째 |
| 2022년 7월 5일, 경북 안동시 |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범은 스토키였다... 가정폭력도 휘둘러 |
| 2022년 9월 15일, 서울 중구 | 지하철 화장실서 남성이 여성 역무원 살해... "범행 계획" 진술 확보 |
| 2022년 11월 28일, 대구 달성군 | 겨우 8세인데...스토킹 신고 당하자 피해자 아들 살해 |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 사망으로 귀결된 스토킹범죄 지속 발생**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3

논의 배경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스마트워치'를 통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포함**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범죄예방 · 피해구제

0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약속

-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2022. 2. 24. 발간)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data_pledge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4

논의 진행경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10. 21, 법무부공고 제2022-337호)
[제안이유]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여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동법 제16조의3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출동함

2)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경우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잠정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그 집행을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의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https://www.moj.go.kr/moj/209/subview.do?enc=Zm5jdDF8OE88JTJGYmJzJTJGbW9qJTJGMTU3JTJGNTY0MDY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l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YW5UTNEZmFsc2UIMjZwYWdUTNEMyUyNmJl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10. 21, 법무부공고 제2022-335호)

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안 제31조의6 신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방법 등(안 제31조의7 신설)

1)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에게 결정문 사본과 피해자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하여야 함.

다. 수신자료 제공에 대한 특칙(안 제31조의8 신설)

1)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제16조제2항(수신자료 열람·제공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신자료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https://www.moj.go.kr/moj/209/subview.do?enc=Zm5jdDF8OE88JTJGYmJzJTJGbW9qJTJGMTU3JTJGNTY0MDY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l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YW5UTNEZmFsc2UIMjZwYWdUTNEMyUyNmJl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6

논의 진행경과

• [쟁점1] 전자감독 적용 단계

○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서 지난 소위에서 잠정조치에서 전자장치 부착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의 추가 검토의견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이 전자장치 부착이 되는 경우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아니면 가석방과 같은 구속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판결이 있는 경우가 주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있기 전에, 구속도 되기 전에 상황에서 1회의 스토킹행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게 좀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아마 지난번에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석방제도, 구속제도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행위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조건부 석방제도 등을 통해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 2. 20.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7

논의 진행경과

• [쟁점1] 전자감독 적용 단계

○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너무 잠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잠정조치 속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논의됐는데 피해자 신변보호 명령을 요청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피해자보호명령]에서는 또 왜 전자장치 부착이 빠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봐도 지금 체계의 적합성이나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취지 이런 걸 고민하면, 그러면 여기에도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장기간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자장치 부착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 김남국 위원

체계적으로는 안 맞는……

○ 유상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제도가 막, 여러 가지 들어와 버리니까 조금 복잡해진다는 느낌이 나고……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 2. 20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8

논의 진행경과

• [쟁점2] 전자감독 운용기관

○ 유상범 위원

문제는 거기[전자감독]에 대한 관제는 보호관찰소에 관제센터가 지금 다 있잖아요.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활용되는 제도와 경찰 간의 업무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움직여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제도가 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 이 규정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새로운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입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 김남국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하나도 물적, 인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막 1년이나 2년이나 경과규정을 두는 것보다 법무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6개월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왜 지금 경찰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 2. 20.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9

효과성(effectiveness)을 중심으로 한 쟁점의 재구성

- 효과성 평가 기준: 전자감독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가?
 - 전자감독은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하는가?
 - 전자감독은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억제하는가?
 - 전자감독은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전 인지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가?
- “증거 기반 치안활동”(evidence-based policing):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전자감독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가?
 -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제도적 특성(예: 전자감독 적용 단계, 운용기관 등)과 관계없이] 전자감독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주장이 검증되었는가?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0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 1990년대 후반 가정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재판 전 단계**(pre-trial phase)의 ‘안전대책’(safety plan) 일환으로 시작,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도 확대 적용
-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입법화(Grommon et al., 2017; Gur, Ibarra, & Erez, 2016)
 - 초기에는 **접근금지/보호명령**(no contact/protective order: “only a piece of paper”)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 최근에는 **법원의 선고**(court-mandated) 요건은 유지하되, 1) 접근금지/보호명령 위반 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e.g. 뉴저지 주, 2017년), 2) **보석 조건**(condition of bail; e.g. 테네시 주, 2019년), 3) **가석방/보호관찰 조건**(condition of release/probation; e.g. 매사추세츠 주, 2020년)으로 규정 변경
 - 일부 주는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전자감독 중단(e.g. 유타 주, 2016년)

www.assemblydems.com/gusciora-bill-to-improve-protections-for-stalking-victims-passes-assembly/
<https://law.justia.com/codes/tennessee/2019/title-40/chapter-11/part-1/section-40-11-152/>
<https://www.mass.gov/supreme-judicial-court-rules/supreme-judicial-court-order-concerning-the-imposition-of-global-positioning-system-gps-monitoring-as-condition-of-release-or-of-probation>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1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1. Erez et al. (2012)

-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실시기간: 평균 8주, 최대 2년
- 형사사법 분야 실무자들의 평가 ▶ 긍정/부정 의견 **혼재**(mixed)

일부 형사사법 분야 실무자들은 GPS 감시(▶전자감독)이 적어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준다**(empowering)고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70%)의 형사사법 분야 실무자들은 피해자가 GPS 감시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절반 이상은 GPS 감시가 피해자에게 **잘못된 안전감**(false sense of security)을 준다는 진술에 동의하면서도, 80%는 GPS 감시가 **일반 대중을 더 안전하게** 한다고 여겼다.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2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1. Erez et al. (2012)

–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들의 평가 ▶ 긍정/부정 의견 **혼재**(mixed)

-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이 감소했다고 긍정적 평가
- 형사사법체계가 자신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느낌에 만족
-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졌다는 효능감 제공
- 가해자가 자녀의 아버지인 경우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



- 가해자를 한층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다며 우려
-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보호받고 있다는 시각적 물증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
-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주변 사람에게 가해자가 접근, 피해가 전이/확산
- 접근금지 구역을 좁게 설정(통상 500feet, 약 152m)함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결과 초래
- 잘못된 경보로 인한 놀람과 혼란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3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1. Erez et al. (2012)

– [장기간 관찰된] 체포 여부에 있어 전자감독 실시에 따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Table 3C-10. Logistic regression models of the effect of GPS versus non-GPS on long-term outcome of arrest for all cases, dismissed/acquitted cases, and convicted cases: Midwest site

| | All Cases | | Dismissed/Acquitted | | Convicted | |
|---------------------------------|------------|------------|---------------------|------------|-----------|------------|
| | B | Odds Ratio | B | Odds Ratio | B | Odds Ratio |
|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 .212 | 1.236 | .116 | 1.123 | .261 | 1.298 |
| Male | .094 | 1.098 | .416 | 1.516 | -.509 | .601 |
| Black | .374*** | 1.454 | .372** | 1.551 | .311 | 1.365 |
| Hispanic | -.508 | .601 | -.727 | .483 | -.118 | .889 |
| Age at DV Incident | -.057*** | .944 | -.052*** | .949 | -.054*** | .947 |
| Number Prior Arrests | .041*** | 1.042 | -.038*** | 1.039 | .048*** | 1.049 |
| Current Crime – Felony | -.330** | .719 | -.250 | .779 | -.350 | .704 |
| Intercept | 1.397*** | | 1.049** | | 1.682*** | |
| Model Chi-square | 201.376*** | | 114.099*** | | 67.745*** | |
| R-Square | .143 | | .135 | | .140 | |
| N | 1,804 | | 1,095 | | 612 | |

* p<.05, **p<.01, ***p<.001.
Reference categories: White.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4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2. Grommon et al. (2017)

- 재판 전 단계에 법원의 선고로 전자감독이 실시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효과 측정
- 전자감독 효과 평가 기준: 1) 재판 불출석(failure to appear to court), 2) 조정절차 불출석(failure to appear to meeting), 3) [기타 범죄로 인한] 재체포(rearrest) 4)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체포(domestic rearrest)
- 전자감독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확인된 것은 2) 조정절차 불출석에 불과

Table A1. Cox Regression by Quasi-Experimental Condition with Imbalanced Covariates

| Estimation Model | Failure to Appear to Court | Failure to Appear to Meeting | Rearrest | Domestic Rearrest |
|---------------------------|----------------------------|------------------------------|--------------|-------------------|
| | Exp(B) (SE) | Exp(B) (SE) | Exp(B) (SE) | Exp(B) (SE) |
| <u>Propensity Matched</u> | | | | |
| Treatment Group | 1.13 (0.44) | 0.76 (0.12)** | 1.40 (0.17) | 1.33 (0.29) |
| N Treatment | 573 | 573 | 573 | 573 |
| N Comparison | 573 | 573 | 573 | 573 |
| Model Fit Indices | | | | |
| -2LL | 395.51 | 3681.59 | 2011.04 | 699.43 |
| χ^2 (df) | 15.36 (14) | 75.58 (14)*** | 29.86 (14)** | 11.44 (14) |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5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미국

- 단 한 건의 효과성 평가 연구의 결론: 재범 방지 효과 없음

Evidence Rating: No Effects - One study



Date: This profile was posted on June 14, 2018

Program Summary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601#relatedpractices>



Program Profile: Pretrial GPS Supervis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Defendants (Western Region, United States)

This is a court-based, pretrial, GPS supervision intervention for defendants arrested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offenses. The program is rated No Effects. Program participant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s in risk of rearrests, domestic rearrests, or failure to appear in court. However, the program did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s in defendants' risk of failure to appear at meetings with pretrial services.

의도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낮음

A No Effects rating implies that implementing the program is unlikely to result in the intended outcome(s) and may result in a negative outcome(s).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6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영국

- 영국 최초로 런던에서 [스토킹 포함]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출소 후 전자감독 시범운영(2021. 3월, 약 200명, 투입예산 23만 파운드)
- 런던시 치안 및 범죄담당관실(MOPAC: Mayor's Office for Poling and Crime)을 중심으로 운영
- 전자감독 대상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시 보호관찰에 통보, 보호관찰에서 조치
- 전자감독 시범운영 대상 가해자 요건
 - 18세 이상
 - 위해 가능성 '매우 심각' 평가
 -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형 복역
 - 런던 소재 교정시설에서 출소
 - (위치추적이 가능한) 독립된 주거시설에 거주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scheme-to-tag-domestic-abuse-offenders>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7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운용 국외 사례: 호주

- 태스매니아 주 Project Vigilance (당초 3년 예정이던 시범운영 연장: 2018. 11월~ ; 279만 호주달러, 약 24억 4천만원; 약 100명)
 - [스토킹을 포함] Family Violence Act 2004(Tas)상 법원의 선고로 가정폭력명령(FVO: Family Violence Order; 우리의 잠정조치와 유사)으로 전자감독 가능
 - 경찰가정폭력명령(PFVO: Police Family Violence Orders; 우리의 긴급응급조치와 유사)으로는 전자감독 불가
 -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석 조건으로도 전자감독 활용 중
 - 경찰소방응급본부(DPFEM: Department of Police, Fire and Emergency Management)을 중심으로 운영
 - 같은 기간에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안전경보시스템(personal safety alarms; 양방향 통신 가능, GPS 기능 및 SIM 카드 내장) 지급

<https://anrowsdev.wpenginepowered.com/wp-content/uploads/2019/10/anrows-electronic-monitoring.ANROWS.pdf>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8

논의 및 시사점

- 전자감독이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한다는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증거는 아직 충분치 않음**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가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GPS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Gur, Ibarra, & Erez, 2016).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스토킹 피해자 간에도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음** ▶ 평가기준의 다양성 및 평가에의 어려움
- 스토킹을 포함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감독을 적용해 온 국외의 경험은 장치 사양 뿐만 아니라 **전자감독 적용 단계**(e.g. 접근금지명령/위반 시 제재/보석 또는 석방 조건), **운용기관**(e.g. 보호관찰/경찰) 등에 따라 스토킹범죄/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도 설계의 중요성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2023. 4. 27)

19

Q & A

감사합니다!

contact: m.han@police.ac.kr

다.
아동성범죄자 거주지의
제한 관련 해외 입법사례

- 이지혜 국장(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아동성범죄자 거주지의 제한 관련 해외 입법사례



고려대학교 국제법 연구센터

이 지 혜 국장

목차



<서론>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

2. 제시카법 거주지의 제한의 대한민국 적용 및 시사점

- 1) 대한민국의 제시카법 적용
- 2) 시사점

<본론>

1. 미국주내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 및 시행효과

- 1)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略史)
- 2) 미국주별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a. 플로리다
 - b. 캘리포니아
 - c. 텍사스
 - d. 노스 캐롤라이나
 - e. 뉴욕
 - f. 유타

<결론>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1) 일반적으로 아동 성범죄는 사춘기 이전인 아동으로부터만 성적 욕망을 느끼는 페도필리아보다는 현재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인 성도착등을 가진 가해자로부터 더 자주 일어난다

2)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 오이균 (1989년 사건), 이춘재 (1993년 사건), 김해선 (2000년 사건), 김근식 (2006년 사건), 조두순 (2008년 사건), 양윤식 (2010년 사건), 김길태 (2010년 사건), 김수철 (2010년 사건), 고종석 (2012년 사건), 임철수 (2012년 사건) 중 김해선, 김근식, 양윤식, 임철수를 제외하고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들이다

3) 현재 아동 성범죄의 실태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범죄의 횡수마저 늘어나고 있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다

4)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일어난 범죄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아동들이 본인들의 피해사실을 어른들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피해아동들이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신의 사회로부터의 극복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

* 특정 범죄자 출소 대비

1) 통계제시를 통한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및 재범의 위험성 부각

ㄱ) 경찰범죄 통계

-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
| 발생건수 | 6,754건 | 5,758건 | 5,543건 |
| 전체 강간·강제추행 대비 비율 | 28.7% | 26.5% | 27.3% |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

ㄴ)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통계

| 총 등록자(명) | 신규 등록 | 누적 등록 |
|----------|--------|---------|
| 2019년 | 71,012 | 87,864 |
| 2020년 | 82,647 | 100,935 |
| 2021년 | 94,160 | 114,420 |

| 구분(명) | 대상자 재등록 | |
|-------|---------|------|
| 2019년 | 1,094 | 8.5% |
| 2020년 | 1,263 | 9.7% |
| 2021년 | 1,106 | 8.2% |

ㄴ)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자료 구축에 따르면
 2014년 - 2020년 아동성범죄자 중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의 26.8% ,
 13 ~ 18세 대상 범죄자의 34.1%가 재범자이다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

* 특정 범죄자 출소 대비

2) 지금까지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과 한계에 대한 언급 및 법무부의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 검토

ㄱ) 조두순, 김근식 등 특정 범죄자 출소 대비 계획에 대한 검토

- 조두순 (2020.12.12. 출소) 관리를 위해 초소 설치, 청원경찰 근무, 전담 보호관찰관 등 '21.4월까지 총 2억 2,383만원 예산 사용
- 인력, 예산의 한계로 모든 고위험 성범죄자에 개별적인 출소 대책 수립, 시행은 불가

ㄴ) 제시카법 도입 주장 (법무부 2023년 주요업무계획)

- 미국의 '제시카법'을 도입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거주 제한
- 고위험 성범죄자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

< 반대의견 > 과도한 기본권 제한, 이중처벌/사실상 대도시권에서 제한규정에 맞게 거주할 수 없어 지방으로 떠밀리는 풍선효과 발생 우려 /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범죄자들의 사회복귀 저해



미국주내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 및 시행효과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동 성범죄 사건 “*People v. Benson*”(1865)

1856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13세 여성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People v. Benson* 사건은 신고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1940년대까지 캘리포니아내 기소된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은 그 시대부터 커져왔다

*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법 (Child Report Abusing Laws)” (1963)

미국내 아동범죄 관련 법이 통과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3년 - 1967년 사이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례를 공공 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법”이 그 첫번째 법이었다. 이 신고법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관리국, 아동 가족 관리국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채택된 법이었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이하 “CAPTA”) (1974)

1) 미국내에서 정식으로 아동성범죄 방지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통과된 법으로 오늘날 미국 아동성범죄의 방지 체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법으로, 1976년까지 모든 미국의 주에 아동 성적 학대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신고법 (예를 들어, 14세 - 18세 이하와의 비자발적인 성행위, 근친상간, 자발적인 성행위에 대한 신고)이 실행

2) 아동 신체적 학대, 아동 방치 및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된 예방, 조사, 평가등의 활동, 관련 연구, 관련 기술 지원 및 데이터 수집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

3) 최근 2018년 개정 (즉, 아동 복지기관, 사회 복지기관, 약물사용 장애치료 기관, 의료진, 공중 보건 및 정신 건강 기관등과의 개발 협력 촉진하 주정부에 보조금 지급 조항 첨가) 2019년 1월 개정 (즉, 선의로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책임 면제)

4) 이 치료법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가 잠시 주춤하는 현상까지 보였다고 한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제이콥 웨털링법 (The Jacob Wetterling Act) (1994)

< 아동 성범죄 Case#1 Danny Heinrich - Jacob Wetterling (1989) >

1) 1994년에는 성범죄자 또는 유괴 전력이 있는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등록 (즉, 주거지가 포함됨으로서 미국내 최초의 성범죄자 주거지에 대한 제한) 규정하고 공개하도록 한 제이콥 웨털링법이 제정

2) 제이콥 웨털링법은 1989년 아동 성범죄자 대니 하인리히가 11세 남아 웨털링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3) 사건발생 이 후, 아동성애자가 저지른 증거가 나오면서, 성범죄자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면서 연방 의회가 성범죄자/유괴전력 있는자의 주소를 등록/공개하도록 주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담은 법이다



Danny Heinrich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메간법 (Meghan's Law) (1996)

< 아동 성범죄 Case#2 Jesse Timmendequas – Meghan Kanka (1994) >

1) 이 사건은 뉴저지주의 7살 여아 메간 칸카가 2번의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였던 이웃주민 제시 팀덴데쿠아스로부터 강간 후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으로, 팀덴데쿠아스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2)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여론은 충격으로 경악, 인근지역내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주민들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여론이 급상승

3)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주는 제이콥 웨털링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94년, 기소된 적이 있는 재범 이상의 성폭행범들은 석방된 날로부터 향후 10년간 주소지를 주 정부에 등록해 모든 신상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메간법'을 의결, 1996년에는 미국전역에서 통용되도록 연방법으로 제정 되었다



Jesse Timmendequas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메간법 (Meghan's Law) (1996)

< 아동 성범죄 Case#2 Jesse Timmendequas – Meghan Kanka (1994) >

1) 제정된 '메간법'으로 인해 현재 미국내 부동산 주택거래시 판매자와 거래자간에 작성되어야 하는 'Megan's Law Data Base Disclosure'서류가 적용되고 있다

2) 이 서류는 주택매매시 판매자가 인근 지역 주변내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줌으로써, 구매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거주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주요하고 효율적인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Jesse Timmendequas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성폭력자 치료 및 주의법에 관한 지미 라이스 비자발적 민사 수행
(Jimmy Ryce Involuntary Civil Commitment for Sexually Violent
Predators' Treatment and Care Act) (1998)

< 아동 성범죄 Case#3 Juan Carlos Chavez - Jimmy Ryce (1995) >

1) 플로리다주내 레드랜드내 9살 남아 지미 라이스가 아동 성범죄자 후안 카를로스 차베스에게 납치, 강간, 살해, 몸이 절단된 끔찍한 사건이었다. 가해자 차베스는 2014년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으로 처형되었다



Juan Carlos Chavez

2)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외침이 촉발. 그리하여 사건발생 3년 후인 1998년,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미 라이스 법으로 알려진 “성폭력자 치료 및 주의법에 관한 지미 라이스 비자발적 민사 수행”을 통과. 이 법은 성범죄자가 감금에서 풀려난 후 추후 평가 위해 구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무기한 민사상 수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례의 약사 (略史)]

* 제시카법 (Jessica's Law) (2005)

< 아동 성범죄 Case#4 John Couey - Jessica Lunsford (2005) >

1)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의 9살 여아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옆집 이웃남성 존 쿠키에게 밤에 납치, 감금, 수 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쓰레기 봉투안에 넣어져 생매장을 당한 끔찍한 살해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금 급상승



John Couey

2) 플로리다주는 2005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안을 의결, 이 후 미국내 대략 30 주들이 각 주내 실정에 맞는 제시카법을 시행했다. 제시카법 조항 중 하나인 “거주지 제한정책”은 현재 미국내 대략 36주가 시행하고 있다

3)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들을 최대한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서 범행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는 이점,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주별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Florida

[Florida 제시카법]

플로리다 (Florida)

(a) 제시카법 내용

a) 12살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 (lewd or lascivious acts)로 유죄판결을 받은 초범 아동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징역기간 2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mandatory minimum sentence of 25 years in prison and a maximum of life in prison for first-time child sex offenders)을 부과;

b) 평생동안 전자추적장치 부착 의무화; 및

c) 거주지의 제한 (1,000 피트 = 304 미터이내)

[Florida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플로리다주내 거주지의 제한에 관한 찬반 여론

a) 플로리다주내 산타로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플로리다주내 첫 번째 "거주지 제한 조례 (Residency Restriction Ordinance)"를 창설한 기관으로 이 법안은 1996년에 통과, 이 조례를 위반할 시 체포될 수 있는 형사 범죄로 분류되었다. 산타로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재까지 대략 몇 상당수가 조례를 위반, 성공적으로 기소되었다고 언급했다

b) 반면에, 2007년 플로리다주내 델토나 시 (City of Deltona)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제한" 조항에 맞서는 두 성범죄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지불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판결 근거는 수정헌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적 대리권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잠재적인 재산 손실 및 강제적인 거주지 이전"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의견을 비춘 판사들의 시각은 거주지 제한정책은 한 가족의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책으로 성범죄자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죄자의 권리를 능가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Florida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플로리다주내 제시카법 개정 후 가해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

a) 현재 플로리다주내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자들 포함)들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학교, 보육 시설, 공원 또는 놀이터에서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

b) 각 성범죄자들이 어떤 종류의 범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성범죄자들이 공원이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짓고 있으며, 특정 시나 카운티에 따라 성범죄자들이 개별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접촉할 수 없는 사람, 근처 가까이 방문할 수 있는 또는 없는 지역사회에 대해 설명해 놓은 조례를 두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들 중 교정청 (Department of Corrections)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의 제한에 대해 판사가 정한 특정 지침이나 제한에 따라야 하며, 성범죄자들이 언급한 관련 시설에서 1,000피트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본인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보안관 부서에 업데이트 시켜야 할 의무

c) 위의 법령을 위반할 시, \$1,000의 벌금 & 최대 365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1급 경범죄형부터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3급 중범죄형이 있다

California

[California 제시카법]

캘리포니아 (California)

(a) 제시카법 내용

- a) 14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15년이상 종신형 (mandatory minimum of 15 years to life)을 의무적으로 부과.
강제적인 성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연속적이고 (consecutive), 감형없는 징역형 ;
- b) 평생동안 전자추적장치 부착 의무화 (비용도 가해자 부담); 및
- c) 거주지의 제한 (2,000 - 2,640 피트 = 609 - 804 미터이내)

[California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캘리포니아주내 거주지의 제한에 관한 찬반 여론

a) 201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샌디에고 카운티의 학교나 공원에서 2,000피트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금지하는 제시카법 판결이 위헌이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판결. 이 판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관점내 노숙자 성범죄자는 감독하기 어려우며, 성범죄자가 거주지가 없고 위치를 알 수 없을 시 이는 사건과 관련된 노숙자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집행 활동을 방해, 노숙자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위한 재활 서비스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어 어린이를 포함한 대중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내려졌다

b)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Broad of Prison Terms의 전 의장 및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주 상원의원들은 이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판결, 제시카법 거주지의 제한은 우리 이웃과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법안으로서 샌디에고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입장들을 밝힌 바 있다

[California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캘리포니아주내 제시카법 개정 후 가해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

a) 노숙자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우려와 법원과 법집행 기관의 노숙자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b) 하지만 201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으로 제시카법의 거주지 제한이 캘리포니아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등록된 성범죄자가 “고위험자”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이 학교나 공원 근처 (2,000 – 2,640 피트)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Case by Case로 제한할 수 있다

c) 하지만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개정 이후 2017년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성범죄자 등록부에 따르면, 등록된 노숙자 성범죄자 수는 6,329명으로 2015년 1월의 6,422명보다 93명밖에 줄지 않았다.

Texas

[Texas 제시카법]

텍사스 (Texas)

(a) 제시카법 내용

a) 17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25년이상 종신형 (mandatory minimum of 25 years to life)을 의무적으로 부과; 6세 미만의 아동 또는 7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동 납치, 상해, 강간한 성범죄자에게는 감형없는 25년형 에서 99년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의무적으로 부과;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종신형 및 사형선고 심의 ;

b) 출소 시 가석방 위원회 전자 감시 대상인 성범죄자들의 실시간 지속적인 전자장치 추적 ; 및

c) 거주지의 제한 (1,000 피트 = 304 미터이내)

[Texas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텍사스주내 제시카법 개정 후 가해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

a) 텍사스주는 아동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거주지 제한을 적용시키는 법이 텍사스주 자체내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닌 텍사스주내 각 도시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 조례내 현재 텍사스주에서는 집행유예 (“probation”) 또는 가석방 (“parole”) 중인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 성범죄자들에 한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판사가 금지시킬 수 있다 (일명, 아동안전지대 “Child Safety Zone”)

b) 법원과 가석방 심의 위원회 (“Parole Board”)는 법령에 지정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도 필요시 성범죄자들에게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가석방 심의 위원회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조건에서 풀려난 성범죄자들에게는 거주지 제한정책을 적용할 권한은 없다

[Texas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텍사스주내 거주지의 제한에 관한 찬반 여론

a) 2023년 1월 한 텍사스의 NGO “Texas Voices for Reasons and Justice”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제한에 대해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정에서 또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에, 또 성범죄자들이 새로이 거주하는 위치를 알리지 않고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허위주소를 등록하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기에, 고용에 대한 장벽을 만듦으로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혜택 역시 받지 못할 수 있기에, 그리고 도피로 인한 범죄 재범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주민들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뿐이다” 라 의견을 비춘바가 있다

b) 하지만, 텍사스 전역의 노숙자 전문가들은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신 질환,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재정부족을 들은 바 있다. 그렇기에 성범죄자들이 거주지의 제한으로 노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정을 짓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주민들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앎으로 인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있어 안전하다라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사항이라 본다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제시카법]

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a) 제시카법 내용

- a)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300달이상 종신형 (Imprisoned for 300 months to life without parole; provided, however that in no case shall the person receive an active punishment of less than 300 months)을 의무적으로 부과 ;
- b) 성범죄자로 출소한 가해자는 출소일로부터 10년 이하 전자감시 대상 ; 및
- c) 성범죄자 한에서 거주지의 제한 (1,000피트 = 304 미터이내)

[North Carolina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노스 캐롤라이나주내 제시카법 개정 후 가해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

- a) 현 노스 캐롤라이나는 성범죄자로 분류된 사람은 학교 또는 보육 센터가 위치한 부지의 대지 경계선에서 1,000피트 이내에 주거를 설정하거나 주거를 유지해서는 안되는 것을 규정짓고 있다
- b) 뿐만 아니라, 탁아시설, 운동장, 학교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빈번히 다니는 곳으로 지정된 곳에서 300피트 이내 걷는 것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아동을 돌보는 일이나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직업 역시 제한하고 있다
- c)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성범죄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이 새로 출소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데는 기여를 했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했다

New York

[New York 제시카법]

뉴욕 (New York)

(a) 제시카법 내용

- a)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18세 이상 성범죄자에게
10년 - 25년 부정기형 (Imprisoned for 10 to 25 years in
prison as indeterminate sentence)을 의무적으로 부과 ;
- b) 성범죄자로 출소한 level 3에 포함되는 가해자는
전자감시 대상 ; 및
- c)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받는 성범죄자 한에서
거주지의 제한 (1,000피트 = 304 미터이내)

[New York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

* 뉴욕주내 제시카법 개정 후 가해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

a) 뉴욕주는 현재 주 전체에 걸친 성범죄자 거주 제한은 없다

b) 뉴욕 주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해 뉴욕주 행정법에 의하면 특정 범죄로 복역중인 level 3 등록자만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감독을 받는 경우, 뉴욕주 법에 따라 학교 또는 기타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서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c) 또한 특정 범죄자를 Case by Case로 거주지 제한 평가하는 현재 법안이 뉴욕주내 계류중이다

d) 뉴욕 주내 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 1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뉴욕주에 있는 62개 카운티 월별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결과, 거주지 제한 정책의 억제 효과에 있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범 성범죄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Utah

[Utah 제시카법]

유타 (Utah)

(a) 제시카법 내용

- a) 14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25년이상 종신형 (Imprisoned not less than 25 years, may be for life)을 의무적으로 부과 ;
- b) 성범죄자로 출소한 가해자는 가석방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자감시 대상 ; 및
- c)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없음

[Utah 제시카법 & . .]

a) 이렇듯 유타와 같이 현재 미국내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않는 주들은 알래스카 (Alaska), 콜로라도 (Colorado), 하와이 (Hawaii), 캔자스 (Kansas), 메릴랜드 (Maryland),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미시간 (Michigan), 미네소타 (Minnesota), 네바다 (Nevada), 뉴저지 (New Jersey), 뉴멕시코 (New Mexico),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유타 (Utah), 버몬트 (Vermont) 대략 14주이다

b) 그러나 비록 거주지의 제한에 대해 직설적으로 마련된 법은 없다 하더라도, 하와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위의 주들은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Case by Case로 관련 감독관들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및 이사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두고 있다



제시카법 거주지의 제한의 대한민국의 적용 및 시사점

[대한민국의 제시카법 적용]

- a)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을 포함한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개해야 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가지 이다
- b) 현재까지 정식으로 대한민국내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 중 위의 신상정보 중 실제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사례는 많지 않다. 즉, 이는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미국내의 주들과는 달리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 아동 성범죄자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미국내 다수의 아동 성범죄자들과 유사한 점은 “고위험자”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행 및 추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들의 기준 위험성이 상중으로 대부분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었으며, 재범율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제시카법 적용]

d)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제시카법의 거주지의 제한은 개정 후에도 성범죄자가 “고위험자”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이 학교나 공원 근처 (평균적으로 2,000 - 2,640 피트)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즉, 각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 사례의 정황에 근거하여 Case by Case대로 가해자들에게 여전히 거주지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e) 대한민국 역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법원 결정이나 명령, 보호관찰소 신청으로 준수사항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들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시카법 적용]

f)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의 주들과 다른 점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날 시, 법원 결정이나 명령,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제한들도 같이 끝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내 그리고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같이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또한 이런 특정 범죄자들의 제한과 처벌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과 가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제시카법의 거주지의 제한의 적용 시도는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필요하다 본다

[시사점]

a) 구분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이 피해자 집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을, 아이들이 노는 곳을 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가해자들의 인권 역시 이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자들이 “정당한 근거없이 위 언급된 곳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b)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대중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한이 불합리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양극의 구도가 균형잡힌 구도로 유지되는 선에서 거주지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다

결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각각의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보다 나은 종합적인 대책의 강구가 그 만큼 시급하단 것이다..
강조되어야할 또 다른 점은 가해자의 정신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는 많은 강력범죄들이 그렇듯 처벌이 필요한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해자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닌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가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해자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주민들의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정책”과 가해자의 “정신적인 치료”의 이행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제시카법의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즉, 성범죄를 용이하지 못하게 해야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경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지형 차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기타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에 보호감호 / 성충동 약물 치료 / 정신 치료 등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정책을 도입하는 과정내 주시해야 할 점은 정책 자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아닌 제시카법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적인 정책으로 도입했을 시 ..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일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를 위해서는 시도가 필요하다.. 시도 없이 결과를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 성범죄 휴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각 조직과 단체들의 종합적인 지원하에 안타까운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 곳을 꿈꾸어 본다..

감사드립니다

04

토론

사회적약자보호방안과 새로운 제도 도입의 고려사항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먼저 세미나에 약간의 견해를 보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찰청,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들에 대해 발제해주신 발제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입법보좌기구에 속한 입장에서 새롭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잠깐 고민해보는 것으로 제 토론 시간을 채우고자 합니다.

2. 스토킹 가해자 전자감독과 실무상의 문제

스토킹 가해자 전자감독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 내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감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스토킹처벌법」은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잠정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또한 잠정조치의 일부로, 이른바 ‘4호조치’라 불리는 유치(留置)를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4호조치의 인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보다 제약이 덜한 중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입이 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향에 비추어 보수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관련 신청·결정 현황 |

(2021. 10. 21.~2022. 5.)

| | 계 | 2호 | 3호 | 4호 | 2호·3호 | 3호·4호 | 2호·4호 | 2·3·4호 |
|------|--------|--------|--------|--------|--------|--------|--------|--------|
| 경찰신청 | 3,695 | 231 | 81 | 141 | 2,897 | 9 | 6 | 330 |
| 법원결정 | 3,136 | 187 | 74 | 68 | 2,665 | 3 | 4 | 135 |
| 인용비율 | 84.87% | 80.95% | 91.35% | 48.22% | 91.99% | 33.33% | 66.66% | 40.9% |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22.

지금까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가 주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 신청에 거의 100%에 가까운 승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1차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건수 및 승인 건수, 승인율

| 시도청 | '18년 | | | '19년 | | | '20년 | | | '21년 | | | '22.1~8월 | | |
|-----|-------|-------|------|--------|--------|------|--------|--------|------|--------|--------|------|----------|--------|------|
| | 신청 | 승인 | 승인율 | 신청 | 승인 | 승인율 | 신청 | 승인 | 승인율 | 신청 | 승인 | 승인율 | 신청 | 승인 | 승인율 |
| 합계 | 9,460 | 9,442 | 99.8 | 13,711 | 13,686 | 99.8 | 14,825 | 14,773 | 99.6 | 24,901 | 24,810 | 99.6 | 18,902 | 18,806 | 99.5 |

| |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 상해·폭행 등 | 성폭력 | 가정폭력 | 협박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 기타 | 합계 |
|---------|--------------|---------|-------|-------|-------|--------|-------|-------|--------|
| 2021 | 139 | 2,299 | 6,458 | 4,442 | 3,201 | 3,679 | 1,428 | 3,164 | 24,810 |
| 2022 8. | 95 | 1,581 | 3,899 | 3,443 | 1,677 | 2,143 | 4,266 | 1,702 | 18,806 |

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 2022.

그러나 경찰의 안전조치가 완벽할 수는 없고, 실제 안전조치에 실패한 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에 모든 잘못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합니다.¹⁾ 전자감독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알아야 함은 물론, ②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용인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²⁾ 한편 잠정조치의 대상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이므로 전자장치 자체로 인한 제약은 가급적 가벼운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³⁾ 이러한 점들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단순히 ‘전자감독을 도입 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자감독제도와 장비, 시스템 등에 있어 새로운 것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고민은 스토킹 가해자 전자감독의 감독 주체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현행 전자감독 주무부처는 법무부입니다. ①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 ② 전자감독은 그 구조상 접근금지와 함께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에 수사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장비, 인력,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 대한 감독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경찰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원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스토킹 특유의 전자감독장비·시스템 등이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자원에 대한 의존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어느 측면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따른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자체는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난한 작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해자를 만났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살해당한 경우 등이 발견됩니다(이소진, 「경찰 신변보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22, p.5).
- 2) 만약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면 이는 잠정조치의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3)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반드시 감독장비가 ‘발찌’의 형태여야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문의 정책공약집 스마트워치 기재 또한 마찬가지 취지로 생각됩니다.

3.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 우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관하여는 실시 중인 미국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⁴⁾과 함께 주 법원에 의해 일률적 거주지 제한에 대한 위헌이 선언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⁵⁾ 개인적으로는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수사항으로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거주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제한이 적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번 토론문에서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도입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현행 우리 법제 중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 가장 유사한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5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의2 ‘주거지역의 제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노숙생활을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시설(〇〇시 〇〇구 〇〇공원로 82(〇동, 〇〇〇썩터)에 거주할 것’과 같은 내용이 판결문에 부가되고 있고,⁶⁾ 후자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와 같은 내용이 판결문에 부가되고 있습니다.⁷⁾ 두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는 그 취지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부과 빈도 또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현황(성범죄자)

| (단위 : 명) | | | | | | |
|----------|------|------|------|------|------|----------|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10월 |
| 실시인원 | 271 | 314 | 328 | 375 | 378 | 390 |

4) 뉴욕 주의 52개 카운티에서 199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체포된 성범죄 비율과 거주지 제한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재범 비율에 별로 차이가 없었고, ② 아이오와 주의 2005년 거주제한거리 확대 전후 성범죄자의 상습성을 비교한 결과 감소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③ 콜로라도 주의 경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과 초범을 비교할 때 거주지 제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가현,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미국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대한성학회지』, 제2권 제1호, pp.20-21). 미국 내에서도 효과는 없는 상징적인 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Williams et al, 'The Politics of Symbolic Laws: State Resistance to the Allure of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Law&Policy*, vol.42, issue 3, 2020, pp.209-235).

5) In re Taylor, 60 Cal. 4th 1019, 343 P. 3d 867 (Cal. 2015); 발제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6)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2022.

7) 법무부 보호관찰과 제출자료. 2022.

거주장소 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현황(성범죄자)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10월 |
|----|------|------|------|------|------|----------|
| 건수 | 5 | 6 | 8 | 1 | 3 | 0 |

거주장소 제한 대상지역 유형별 분류 현황(2017-2022. 10.)

| 총계(건) | 갱생보호시설* | 아동(청소년) 복지·위탁시설** | 기타*** |
|-------|---------|-------------------|-------|
| 515 | 223 | 260 | 32 |

* 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갱생시설(한국교화복지재단) 등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자립센터, 쉼터, 청소년회복시설 등
 *** 부모(친족) 주거지, 취업업체 기숙사, 병원, 귀주예정지 등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2022.

그렇다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비추어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일률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⁸⁾ 거주지 제한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거주 불가의 범위가 지나치게 주거이전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거주불가 구역의 범위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그 인근에 거주하게 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는 그 구역 내외 주거비용의 변화와 같이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실무상으로는 관리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관리가 문제될 때마다 국회는 경찰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던 경찰은 반기 1회에서 현재는 등록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⁹⁾ 문제는 소재 파악이 어렵고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는 노숙인 등 그 주거가 불분명한 자들이며, 여관 등 거처를 자주 옮기는 경우가 많아 그 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¹⁰⁾ 이러한 까닭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소재불명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8)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5 결정,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결정, 성인대상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취업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 결정 참조.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7항.

10)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및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의 유선질문에 기초한 것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소재불명자 수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계 | 44 | 60 | 89 | 85 | 120 |

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 202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거주지 제한을 과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 범죄자에게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단행법률 보다는 전자장치 부착과의 연계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등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나가며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스톱킹 전자감시 제도는 일응 도입은 가능하되 구체적인 형태의 문제로 느껴진 반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은 도입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민경 교수님께서는 스톱킹 가해자 전자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지혜 국장님께서는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부과 등 다른 여러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도를 여쭙보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 제재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민경화 경정(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 범죄 현황

◦ 성폭력 범죄

| 구분(건) | 총계 | 강간·강제추행 (13세미만 대상) | 카메라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
| '18년 | 31,396 | 23,467(966) | 5,925 | 1,365 | 639 |
| '19년 | 31,396 | 23,531(1,012) | 5,762 | 1,437 | 666 |
| '20년 | 29,467 | 21,702(814) | 5,032 | 2,047 | 686 |
| '21년 | 32,080 | 20,267(821) | 6,212 | 5,067 | 534 |
| '22년 | 40,661 | 22,582(858) | 6,882 | 10,594 | 603 |

- 아동(13세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은 한해 평균 약 894건 발생
- 최근 5년 재범률은 △ 전체 성폭력범죄 6.1%, △ 강간·강제추행 6.0% △ 아동대상 강간·강제추행 8.3% → 아동성폭력의 재범 위험 ↑
- 조두순('20.12월), 김근식(재구속)·박병화('22.10월) 등 형기가 종료된 여성·아동 대상 상습 성범죄자 출소 → 재범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

◦ 관계성 범죄('22년)

※ 구속 : 기소의견 송치사건 중 구속 비율

- 【스토킹】 △ 112신고 29,565건(日81건), △ 사법처리 10,037명(구속 5.7%), △ 긴급응급조치 3,146건(위반 370건), 잠정조치 6,417건(위반 533건)
- 【교제폭력】 △ 신고 70,790건(日194건) △ 사법처리 12,841명(구속 1.8%)
- 【가정폭력】 △ 신고 225,609건(日618건) △ 사법처리 51,937명(구속 3.6%)

- ▶ 서울 노원 세모녀 살인('21.3월) - 김태현, 게임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가족까지 살해, 무기징역
- ▶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21.11월) - 김병찬 前 여자친구 살인, 1심 징역 40년 및 전자장치 부착
- ▶ 신당역 스토킹 살인('22.9월) - 전주환, 입사동기 여성을 스토킹·살해, 1심 징역 40년, 전자장치 부착
- ▶ 충남 서산 가정폭력 살인('22. 10월) -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고 아내에게 접근하여 살인, 1심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구형

⇒ 당사자 간 위험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관계성 범죄의 재피해 예방, 강력범죄로의 악화 차단이 중요 형사정책적 과제

□ 문제점 및 여론 등

- (성폭력)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제,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보안처분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특정 성범죄 전과자 출소에 맞춰 특별예방활동*(지자체·경찰)을 전개중이나,

* 경기 화성시 강력성범죄자 거주지 주변 안전활동

- ◆ 지자체(화성시) : 안전지킴이 운영(10명, 별도 초소 설치), ○○○ 거주지 주변 순찰
- ◆ 경찰청(경기남부청) : △ 화성서부경찰서 특별대응팀 편성, △ 특별치안센터 2개소 설치 및 기동대 배치, △ CCTV 67대, 보안등 110대 추가 설치 등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특정 성범죄 전과자 감시·관리(전담인력 배치 등)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출소한 조두순 감시·관리비로 혈세 10억 썼다”(23. 2. 16., 조선일보)

- ⇒ ‘제시카법’* 도입, 치료감호 강화 등 형벌로 교화가 어려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재범억제책을 요구하는 여론 고조

▶ 형기 마친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할 입법 필요하다(22. 11. 2, 국민일보)

*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학교·공원으로부터 약300m이내 거주 제한(05년 美 플로리다주), 이후 40개 주 이상에서 거주지 제한 정책 시행(제한거리는 주마다 상이)

-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조치(긴급응급·잠정)가 시행중이나, 현행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 불가, 집요한 스토키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해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범행 예방 불가, △ 피해자가 숨어다닐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감시망 강화 필요, △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 전자감시 시행중

- ⇒ 접근금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제도 개선 추진사항

- ✓ 최근 국회·정부에서는 △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출소 시 거주 제한, 사후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 스토킹 가해자(확정판결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① 전자장치 부착법 성범죄자 출소 시 교육시설 등 주변 거주 제한

- 현행 법률상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제9조의2)하고 있으나,
- 교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피해자 거주 지역 등 거주 제한 장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목적

- ▶ (정부)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 발표(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예정)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교육시설 등 500m 이내 거주 제한 등
- ▶ (송옥주 의원案, '23.1.27) 징역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거주 제한 강화
※ △ 아동·청소년 밀집지역(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주거 밀집지역 △ 피해자 거주 읍·면·동
- ▶ (권철승 의원案, '22.12.7) 어린이집·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 거주 제한, 성폭력범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소 전 사실 통보

② 치료감호법, 성충동약물치료법 사후적 치료감호, 약물치료 근거 마련

-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소 수용(최대 15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나, 청구 기한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사후 치료감호·치료명령이 불가능
- 형기 종료 후 출소하였거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 및 감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치료감호법】

- ▶ (정부案, '22.11.23)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특례 신설(제14조의2), 치료감호 수용기간을 2년 단위로 횡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 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동민 의원案, '22.11.24) 소아성기호증, 고위험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사후 치료명령제도 도입(제44조의6 신설)

【성충동약물치료법】

- ▶ (윤상현 의원案, '23.3.6)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
- ▶ (이수진 의원案, '20.10.7) 13세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 청구(제22조 단서 신설)

③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정부案('23.2.15) / 그 외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現 과태료 → 형사처벌)
△ 잠정조치 불이행죄 벌칙 상향(現 2년이하 → 3년이하) 등 개정

- 사법처리 과정 및 긴급응급·잠정조치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스토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 위급 시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경찰청 관제 시스템(신규 구축) ↔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정보 연동

- 기존의 법원 확정판결 시 부착하던 전자감독 제도와 달리, 잠정조치의 수단으로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자에 대한 장치 부착 및 위치 감시

□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과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에 대한 법감정 등을 고려, **효과적인 가해자 제재방안에 대한** 전향적 모색 필요
- 다만, 「제시카법」 도입, 사후적 치료감호·약물치료에 대하여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및 이중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엄격한 선정 요건 및 과정**(대상자 범위, 법원 결정과정에 정신감정 등 전문가 의견 반영, 청구 기한 등) 규정 등 합리적인 입법 필요
- 특히 제시카법 관련 한계점 지적, 미국보다 협소한 국토면적과 교육시설·주거지역 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시 성범죄 전과자의 특정지역 쏠림 등 우려,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

※ 美 법시행 후 불안정한 거주로 인한 재범률 증가, 노숙사례 급증(캘리포니아주 성범죄 전과 노숙자 수 '06년 88명 → '11년 2천여명) 등 부작용 <하경미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쟁점”>

- 수사단계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은 **현행 전자감독과는 차별화된 예방체계**로서, 인신 구속 못지않은 강력한 기본권 제재조치인 만큼,
 - 경찰·검찰·법원이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와 ‘인권침해’ 양 측면을 고려한 **균형있는 잠정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 **전담인력(상황관제, 초동조치·수사)·예산(시스템 구축 등) 배정과 충분한 준비기간(시행경과 규정)**을 통해 차질없는 제도 시행 필요

사회적 약자의 일상회복 관련 세미나 토론 자료

이기봉 경감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들어가며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그간에 발생한 신당역 사건 등 참혹한 피해로 이어진 주요사건들을 계기로 현장 경찰에게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톱킹, 소년범죄, 신상대상자 관리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치안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는 큰 심적·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범죄 발생(건) | 가정폭력 신고(건) | 데이트폭력 신고(건) | 스토킹 신고(건) ※ 法시행 전후 비교 | 학폭 검거(명) |
|------|-----------|------------|-------------|--------------------------|----------|
| 20년 | 29,467 | 221,824 | 49,225 | - | 11,331 |
| 21년 | 32,080 | 218,680 | 57,305 | 6,971 | 11,968 |
| 22년 | 40,661 | 225,609 | 70,790 | 37,103 | 14,432 |
| 전년대비 | +26.7% ↑ | +3.2% ↑ | +23.5% ↑ | 432.2% ↑ | +20.6% ↑ |

※ 자료: '23년 여성청소년 정책자료집'

사회적약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제도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보다 실효적인 가해자에 대한 조치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

(1)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

이수연 변호사님의 발제문 내용과 같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일부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자녀의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는 훈육의 수단이 폭언·폭력·학대행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피해나 극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체포·구속 등 강력한 형사법적 조치가 필요지만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과 훈육방법의 교정을 통해 원가정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그 경과를 관찰하면서 형사·보호사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유형을 보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62.7%)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아동은 새로운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학교·학원 등학교 문제, 친구들과 연락 단절 등의 상황을 피해아동이 모두 감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대로인 학대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거나 다른 일탈 등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아인가해자를 보호시설로 격리하여 가해자의 경제활동과 관련 교육 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응급조치’나 ‘임시조치’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 현황을 보시면 임시조치 제6호 ‘의료기관이나 그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1.7%)’이 많지 않습니다. 6호 처분을 미이행하는 경우 다른 임시조치로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적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알콜중독·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보호자 동의입원·행정입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장 조치 단계에서부터 강제입원(감호위탁 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교)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의 경우 경찰·검찰의 신청이 아닌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정폭력행위자의 유치장 유치는 아동학대처벌법과 달리 임시조치 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처벌법과 달리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 필요

(2) 스토킹 가해자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효과성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국민의 불안감 해소, 특정범죄자 재범 억제*, 위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수사 등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 2. 형사정책연구원] 전자감독 대상자 408명 대상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행동개선 이유를 위치추적으로 바로 체포될 것이라는 인식(72%), 위치정보가 노출되어 불법행동 자제(91.7%)로 확인

다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집행기관 관련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일선 경찰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舊 신변보호조치)나 보호 조치(긴급응급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다 보면 전자장치 부착 신청 증가로 이어져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상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는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성폭력 범죄의 4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아 특정 죄종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 스토킹범죄만을 전자장치부착법에 추가하는 것 또한 관련 범죄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스토킹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법은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가 폭력행위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법령입니다.

현재 법안대로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1회성 스토킹적 행위가 곧바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조치(전자장치부착)를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스토킹 범죄 없이 곧바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전자장치 부착대상을 무한정 확장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스토킹 범죄만을 전자장치 부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상에 초동대응 현장에서 현행법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즉각적인 가·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긴급잠정조치(가해자 先유치 후 사후 법원통제) 도입, 체포·구속 요건의 완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아동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해외 입법사례

이지혜 국장님의 발제는 미국의 아동성범죄 관련 입법례와 각 주별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며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점검주기별로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의 대부분이 대상자로 등록되고 등록기간이 10년이상으로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선 여청수사관들이 대상자들의 점검·관리에 소요되는 수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3. 2.경부터 경찰청 단위에서 '신상등록 대상자 점검 전담팀'을 일부 경찰서에 시범운영하며 해당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전국 경찰서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관리의 주요체계인 신상등록대상자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자들 중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우리나라형 제시카법 등 재범방지를 위한 거주제한 정책의 시행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간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출소이후 지역 사회 거주여부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 관계기관의 특별대책 수립 등을 보여주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종료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학교 등 특정시설에서 일정거리 내 거주만을 제한하는 것은 재범방지에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시설 내지 구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시설과 구역을 정비·관리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실효적 제재조치 방안 논의에 최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 논의와 현행 제도 내실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사업 확대

장윤모 팀장(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아동·청소년 피해 및 인식 현황

○ 초·중·고등학생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21.11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5명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에 직접 노출 경험 (조사대상 4,012명)
- 범죄 위험에 노출된 학생 중 절반 이상(56.4%)이 채팅, SNS 등을 통해 성적 메시지 또는 사진 전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남

○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아동·청소년) 상담사례 분석 (‘21.5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가해 아동·청소년 중 96%는 '범죄'라는 인식없이 호기심, 재미나 장난, 모방행위 등으로 발생, 4명중 1명은 재발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일단 알지 못한다는게 제일 위험한 요인, 상대방의 의도적인 호의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움 <이수정 교수, '23.3.29. 아동·청소년 피해예방 현장간담회 시>

⇒ (개선방향) 디지털환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어린 세대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음.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 세대의 시각에 맞춘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의식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市(시) 정책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23년도 주요 시책사업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사업)

① 디지털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보급

○ 추진방향

-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작 → 일반 강의용 교안이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익숙한 '영상' 및 사례 중심의 콘텐츠 제작

○ 추진방법

- 관련 전문가 및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현업 담당자로 구성된 TFT 구성, 학교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에 배포
- 자녀의 디지털환경 보호를 위한 학부모 대상 별도 콘텐츠 제작
 - ▶ SNS, 시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제작

② 디지털성범죄 예방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 추진목적 : 학교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또래 문화 형성

○ 추진방법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 중심으로 100~500명 구성
- 사업 SNS 개설 후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활동 등 활동 결과물을 공유,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
- 연말 성과대회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팀 대상으로 시상

③ (아동·청소년) 가해자 재발방지 사업 운영

- 사업대상 :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를 한 청소년
 - ※ 디지털성범죄 행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명령을 받은 학생 등
- 상담내용 : 가해자 위험진단, 심리검사, 치료상담 등
- 결과활용 : 상담사례 분석(유형화 등)을 통한 피해예방 가이드 개발 등

④ AI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영상물 선제적 삭제 지원

- 아동·청소년 피해영상물 → 당사자나 부모 신고없이 선제적인 삭제지원 가능
 - ▶ 삭제지원기관(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피해 영상물 탐지시 삭제 요청(영상물 운용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 '23.3월 지자체 최초 AI 프로그램 개발로 기존 수작업이 아닌 자동탐지 및 검출기능을 통해 탐지속도와 정확성이 대폭 향상
 - ※ '22년 아동·청소년 피해영상물 건수(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2,500건으로 올해 13,000건 이상 피해영상물 선제적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2023 새롭게 바뀌는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시스템 개념도(기술적 모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신속, 정확한 탐지



GPU 기반 고속연산 + 24시간 모니터링



지금까지는 (Before)

앞으로는 (After)

피해영상물 검출속도 ⚡

관련 검색어 입력부터
피해영상물 탐지까지 1~2시간



입력부터 모든 피해영상물
검출까지 3분 내외

피해영상물 정확성 ✓

영상이미지 기반의 탐지기능
↓
관련 피해영상물 탐지범위 및
정확성 제한



영상+음성+텍스트 등 통합인식
↓
탐지범위 및
정확도 100~200%이상 증가

모니터링 시간 📺

근무시간(8시간)에 한정된
모니터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추적 시스템 구축
(근무시간의 재확산 위험성 ↓)

근무환경 개선 ⬆

장시간 피해영상물 노출로
정신적 트라우마 발생



AI 프로그램 대체로
트라우마 사전 방지

특히 선제적 삭제지원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불법영상물의 경우
AI 활용으로 이전보다
3~5배 수준의 삭제지원이 가능

2022년
2,500건



2023년
최대 13,000건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세미나 토론문

- 스토킹 가해자 대상 전자감독 도입을 중심으로

김지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현행 접근금지명령과 스마트워치 활용의 한계

○ 접근금지명령

- 먼저 도입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접근금지명령 이행 확보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법 제정 시부터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였고, 처벌 수위도 상향함
 - ※ 가정폭력은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원래 과태료처분에서 법률개정으로 2021년 1월 20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변경
- 2020년 9월 권인숙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 수준으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 4.1%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2022년 6월1일~7월31일(2개월간). 긴급응급조치(469건), 잠정조치(1,035건) 표본조사결과
-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명령 이행을 위한 강제조치 필요성 대두

○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긴급 신고 돼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되고, '코드 0'이 발동돼 총력 대응체제로 돌입하는 방식
-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걸리는 시간, 위치정보의 오차범위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되었으나, 최근 '3초 이내에 오차범위 20m 이내'의 위치정보를 파악 가능하도록 개선함
- 이후에도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3분 이내)이 가해자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하는데 있어 한계가 드러남

2. 대안으로서 GPS 전자장치 부착

- 2008년부터 형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GPS 전자감독은 2%대의 낮은 재범율 성과를 보이면서, 제도 도입 12년 만에 보석단계에서 가석방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전 단계로 확장됨
-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양방향 전자감독(bilateral electronic monitoring)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와 같은 전자장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구역과 피해자의 현 위치 주변에 buffer zone을 설정한 후 가해자가 buffer zone에 진입했을 때, 위치추적센터와 피해자에게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1) 경찰이 즉각 출동하면 적시에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수 있으며, 2) 피해자도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전자감시가 가해자의 재범방지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됨

* 피해자 위치로부터 반경 50m + 버퍼존 50m

3.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GPS 전자장치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GPS 전자장치 부착이 접근금지명령 이행에 효과적일 수 있는가?

- GPS 전자장치를 통해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은 피부착자가 24시간 자신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전자적으로 감시되고 있고, 부과된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위반하면, 위치추적센터에서 바로 인지하고, 담당자나 경찰에게 경보를 보내, 즉각 출동하여 확실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해 있음

* 이론적 기반 :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한 억제이론과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국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율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GPS 전자장치 부착과 이를 통한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에 대한 인식의 효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현행 전자감독은 대상자에게 GPS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센터에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및 행동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준수사항과 치료 프로그램 부과, 보호관찰관에 의한 집중적인 지도감독 등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전자감독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치료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GPS 전자장치를 통한 단순 기계적 감시만으로는 접근금지명령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유죄판결 전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다양한 처분을 병합해서 부과하기 어렵다는 고려해볼 때, 잠정조치로서 전자감독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도 있음

- GPS 전자장치는 모든 범죄유형과 모든 범죄자에게 효과적인 재범억제도구가 아니며, 재범 위험평가 혹은 적격성평가를 통해 전자감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
- 전자감시의 재범억제 메커니즘이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한 억제이론과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고려하기 어렵거나 전자장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중독,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전자감독을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대상자로 알려져 있음
- 이와 더불어 잠정조치의 일차적인 목적이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이므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피해자의 안전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발생원인, 범행과정,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따른 범행 특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 잠정조치 위반 패턴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2) 전자장치가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에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 GPS 전자장치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측위 정확성, GPS 신호의 안정성, 수신감도 등이 영향을 받으며, 가해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에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함.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100%로 이를 감지해 경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경보가 발생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거나 위치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도 있음
- 경보는 전자장치의 적절한 관리 여부, 전자 효능 방해 행위 여부, 준수사항의 이해여부에 대한 전자적 통지이며, 문제는 경보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신속한 대응 하느냐가 관건이며, 신속한 대응은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함

3)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가해자가 전자장치로 감지되지 않는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와 강압적 통제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안전 및 안전감을 보장할 수 없음
- 접근금지 구역 혹은 피해자에게 근접했을 때 울리는 경보(alert)와 경찰과 관제센터에서 경보의 진위 확인이나 경고를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등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기계장치의 결함, 잘못된 부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장치의 민감도를 높이거나 버퍼존을 넓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거나 접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되고, 이러한 상황은 관리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경보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피해자의 전자장치에 대한 신뢰를 낮춰 안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결론

- 잠정조치의 하나로서 GPS 전자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별다른 접근금지명령 이행 확보 수단 없이 가해자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접근금지명령의 이행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GPS 전자장치를 스토킹 범죄를 해결하는 만능통치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고임. GPS 전자장치의 한계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의 결정에 참여하는 검사와 판사, 피해자, 집행기관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GPS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결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고,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도입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전자감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전문자격을 갖춘 조사관에 의한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및 적격성 평가 체계 구축, 보호관찰직원에 의한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치료프로그램 제공, 피부착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이를 토대로 경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고려와 스토킹 범행 및 가해자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반해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에 놓고, 현재의 법률개정안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강압적 통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해, 처벌, 대책 필요성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1. 공간분리가 필요한 ‘강압적 통제’ 폭력에 대한 이해 필요

- 발제에서 다루는 감호, 전자장치부착, 주거제한 정책/법은 폭력 가해자 행동반경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목표로 하며, 목적은 재발 위험 낮추기임
- 이를 설계할 때 피해자의 연령으로 구분하는 ‘아동 성범죄자’, 범행 횟수로 구분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 혐의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가정폭력’, ‘스토킹’만이 명명되면 다시 통념의 매커니즘이 작동하여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발생함. 아동 성폭력에서 아동의 진술을 중시하지 않거나, 연령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을 수용하거나, 가정폭력, 스토킹을 사소하게 간과하거나, 성폭력 재범 기준을 협소하게 적용하는 경향(예컨대 강간 범죄 전력자가 불법촬영 유포 범죄로 재판받을 경우 이를 동종범죄군 재범으로 보지 않고 ‘초범’으로 간주하는 등)이 여전히 강력함
- 공간분리가 필요한 폭력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 공간분리 정책의 판단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
- 2016년 1월~2021년 11월 배우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 205건, 연인을 죽게 한 사건 142건 판결문을 분석한 2021년 한겨레21 기사¹⁾,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대한 2018년 한국 여성의전화 토론회²⁾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폭력적, 강압적 통제 전력’, ‘소유욕’, ‘다른 관계 차단’, ‘상대를 통제 협박하는 수법 다양화’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판결문에서도 이 단계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관계적 폭력에 대한 인지 없이 특정 행위의 신체적, 물리적 폭력 심각성만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측정하는 낙후된 방식임
- 민윤영(2021)³⁾에 따르면 2015년 잉글랜드에서 ‘강압적 통제’가 범죄화되었고, 2018년 스코틀랜드는 Domestic Abuse (Scotland) Act 2018를 제정하여 배우자 또는 친밀한 관계 파트너 간 폭력 대처의 패러다임을 바꿈.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1) “년 내 여자야” 소유물로 통제…‘교제 살해’ 전조였다, 2021.12.20.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3940.html>

2)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찰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8.11.29. 한국여성의전화 http://hotline.or.kr/news_/48200

3) 민윤영(2021),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심리적, 정서적 또는 경제적 학대 등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을 가정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중하게 처벌함

- 영국 정부는 강압적 통제를 ‘피해자를 의존적이고 종속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키고 피해자의 자원과 개인적 소득을 위한 가능성을 착취하며, 독립, 저항, 탈출 그리고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들(통제적 행위)과 피해자를 해하거나 처벌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행, 위협, 모욕, 겁주기 또는 다른 학대의 행위들의 패턴(강압적 행위)’이라고 의미화함⁴⁾

2. 보호처분인가 형사처벌인가

- 단회적, 신체적 폭력정도를 측정하는 위험성 척도에서 벗어나 관계적, 누적적, 착취적 통제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체포나 구속, 구금이 가능하도록 ‘중대범죄’로 분류되어야 함
- 현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은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와,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음. 처분은 검사재량에 있으며, 형사처벌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기소하지 않는 절차를 두고 있음⁵⁾.
-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한,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한 평가도 ‘가정 내’, ‘친밀한 관계 내’ 발생했다면 하향 평가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도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에 따르면 총 324명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109명(33.6%), ‘배우자의 목을 조른 경우’가 43명(1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가 71명(21.9%),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가 70명(21.6%)으로 나타남. 피해자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상담위탁 처분을 받음⁶⁾
-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보호처분 역시 소극적으로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형사적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고율이 낮아지고 암수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친족성폭력을 예로 들어 친족성폭력을 신고하고도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구속-징역-형사처벌 되지 않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위탁, 가해자 상담위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만이 만연할 뿐이라면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운신, 거주/주거, 학업, 생계활동 모든 생활 유지는 사회적으로 회복하거나 보장하기 어려움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definition-of-domestic-violence> (2021.5.25. 검색), 민윤영(2021)에서 재인용

5) 박혜림(2020),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제’, 이화젠더법학 12권 1호 213~235p,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2019.4.16., http://lawhome.or.kr/webbook/gapok_counselsta2018/index.html#page=4 (2021.5.25. 검색) 참조. 민윤영(2021)에서 재인용

- 가정폭력은 처벌법 목적조항에서 ‘가정의 유지와 보호’ 목적의 폐기를 통한 형사처벌 강화, 중대범죄로의 인식전환을 우선하여 위험성 평가, 실효적인 분리조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보호 처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

3. 스토킹 : 피해자보호조치에서 형사처벌까지

-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보호 긴급조치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놓여 있음.
- 권인숙 의원실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두달 간 일선 경찰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 승인율은 49.1%였음.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 4.1%과 비교해 3배 이상 스토킹 범죄의 보호 조치 위반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⁷⁾
- 스토킹 역시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통제, 지배를 시도하는 기제의 범죄로서, 피해자의 생활 환경과 터전에 대한 입체적인 대비가 필요함.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 시행 이후 기소된 스토킹 사건 중 직장관계에서 고용관계는 9명(23.2%), 직장 동료는 60명(76.8%)였음⁸⁾. 먼저 스토킹 사건 중 피-가해자 관계 및 연고 파악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피해자 직장이 노출되거나 연루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직장 내 고충처리 체계와 연계하여 대비하는 등의 입체적인 대응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4. 피해자 권리보장 : 경찰개입청구권, 형사사법접근권, 참여권

-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여러 처분은 ‘강압적 통제’ 범죄에 대한 몰이해, 젠더폭력에 대한 사소화, 피해자 비난,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 우선 등을 통해 제대로 연구,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동시에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⁹⁾ 절차와 목적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과 법은 결국 피해자 보호에 역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함. 형사사법 정책과 제도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은 신고율, 처분과 결정에 대한 수용율, 재범방지를 함께 상승하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형사사법 정책 제도의 정당성 확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해자 권리보장’이 가치와 원칙으로 제대로 도입되는 것임.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공간보장은 가해자와의 분리, 격리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청, 피해 인정, 보호조치, 체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도 ‘안전 공간 제공’ 일 수 있음

7) 안전신문, 2022.10.5.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최대 15일 걸려... 잠정조치 4호 승인율은 49.1%’, 신용승 기자

8) 안전신문, ‘2022.9.26. ‘스토킹처벌법 후 직장 스토킹으로 69명 기소돼... 동료가 76%’, 정민혁 기자

9) 한겨레, 2022.7.13. ‘형기 마쳐도 감옥에 갇힌 삶... 보호감호자 13명 단식’, 장예지 기자

- 피해자 권리보장은 피해자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 처분 체계에 대한 상세한 안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존중과 세심한 확보, 피해자 의견에 대한 적극적 제출과 발언권 보장, 형사사법 절차의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 보장, 형사처벌, 처분,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 사정의 면밀한 고려 등이어야 함
- 아동학대 역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격리보호, 공간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기반이라는 지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부모까지 아동을 배제한 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가해자의 주장이나 사과도 피해자 아동이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¹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인정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 대책 논의에서도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보장이 기반이 되어야 함이 논의됨

5. 공포 위주의 포폴리즘을 넘어 예산확보, 장기적 대책의 마련

- 유명한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주민의 격리요구가 최근 열렬하게 전개됨. 성폭력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시민들이 문제의식과 요구사항을 모으고, 정부와 정치를 향해 활동을 펼치는 것은 지역사회의 참여 관점에서 중요한 활동임
- 그러나 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권리보장, 신고율-기소율,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는 양형결정,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의 투자와 노력이 개선되지 않은 채 특정 가해자의 출소 시기에 사회복귀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시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은 매우 사후적이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조명하지 못하고, 특정 가해자의 ‘악명’을 강화하여 한계가 큼. 이러한 공포 여론을 근거삼아 급작스럽게 제기되는 포폴리즘적 대책은 결코 국가의 장기적 대책마련, 연구, 예산확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정책 마련과 개선 보완 체계를 대체해서는 안됨
- 예컨대 화학적 거세법안은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조명을 받던 2010년대 초반, 하루만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 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였는지,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는지 현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공포 여론을 ‘활용’하기만 하면 법과 정책 입안 이후 실행과정에서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 신상공개, 주거지 정책에서 어느 기지는 해당 주소를 찾아가 카메라로 촬영하며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음을 직접 촬영을 통해 고발하며, 경찰-여성가족부-법무부가 각각 신상공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취지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질문함. 어느 도서지역 종교 지도자의 경우 신상공개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대상자가 전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음

10) 더나은미래, 2023.4.19. 학대 당해도 변호사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사법접근권 보장돼야, 최지은 기자

- 한국일보는 2022년 ‘치료감호의 눈물’ 연속 보도를 통해서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예산 부족과 투여 미비의 현황을 지적인 바 있음. 국내 유일 치료감호 집행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약물 투여 위주로 있고, 행동치료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해외 치료감호 담당 병원은 의사 1명당 환자 8명~20명 수준(일본)인데, 국립법무병원은 현재 의사 1명당 18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함¹¹⁾

11) 한국일보, ‘치료감호의 눈물 <5> 치료감호 수장도 “이대론 안돼”... 치료감호 현실에 쓴소리 쏟아’, 최나실 기자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5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lines.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